

금융·외환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단상



박근중

전 서울시장지구공민이사장연합회 회장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정쟁이 '레드라인(Red Line: 한계선)'으로 여겨는 에너지 생산 인프라(Infra)까지 서로 공습하는 점면적으로 확장일로(擴張一略)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18일 이란 최대 규모의 사우스 파르스(South Pars) 가스전(田)과 그와 직결된 아살부예(Asaluyeh)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서 카타르의 라스라판(Ras Laffan) 가스시설,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Jubail) 석유화학단지 등을 공격했다. 전 세계 에너지 운수시설에서 에너지시설로 확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Inflation) 우려에 세계 경제도 비상이 걸렸다. 중동 사태 장기화(長期化)에 대한 특단(特段)의 대책이 시급(時急)하다.

미국과 이란 간 정쟁이 격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결국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섰다. 연이은 악재에 한국에선 지난 19일 원·달러 환율이 17.99원 올라 1501.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증가 기준은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개장 직후 1505원까지 치솟은 뒤 1490원대 후반으로 내려섰지만, 장 막판 다시 1500원을 돌파했다. 유가 급등, 달러 강세, 외국인 주식 매도가 겹친 영향이 컸다. 다행히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달러 유통성 위기는 아닌 만큼 과도한 불안은 금방이다. 하지만 금융·외환 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물가 등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실물경제 위기감도 커졌다. 석유화학 업계는 핵심 원료인 나프타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있지만 재고가 곧 바닥날 처지다. 이미 항공·정유 산업도 고유가에 타격을 입었고, 전자·철강 산업도 플루비 상승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UAE로부터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는 성과를 거둬지만 한달간 솟날 들린 수준이다. 한국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봉쇄가 장기화한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산업연구

원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한국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1.8%까지 상승해 산업 전반이 충격 받게 된다. 하지만 금융·외환 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물가 등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쟁 같은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 문제는 원화 가치 하락 폭이 다른 통화에 경위 유독 크다는 점이다. 중동산 원유·가스에 의존도가 높고, 외환 시장의 깊이가 얇은 구조적 한계 탓이다. 단기적으로는 민·관이 협력해 대체 수입원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가능성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교유가 문제를 넘어 에너지 수입 자체가 막히게 된다. 정부는 차관 5·10부제, 산유국이나 외국 석유사가 국내에 비축한 원유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더 과감하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же명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차관 5부제 시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에너지 의존적 산업시스템과 소비 성향을 개선하는 것이다.

미국 제재가 풀린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Naphtha) 수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스콧 베싌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3월12일(현지 시각)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판매 승인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까지 선박에 적재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등에 대한 모든 거래를 오는 4월11일 오전 12시11분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은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을 넘어 공동체의 생존을 도모해야 할 비상시국임을 각별 유념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 경제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정부·경치권·기업·가계 모두 위기 극복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범죄자만 살판나는 검찰 없는 국가 반대다



아침 햇살

고하승 주필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이면 대한민국은 검찰이 없는 국가가 된다.

범죄가 없어서 검찰 없는 국가가 되는 것이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오히려 범죄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검찰이 사라진다면 그건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이를 반대하고 검찰을 없애버린 집권 세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상이 검찰 없는 국가는 없다. 물론 우리가 잘 모르는 아프리카 오지 국가가 어찌 모르겠으나 사법제도가 비교적 잘 만들어진 국가에는 모두 검찰이 존재한다.

심지어 중국도 검찰이 있다. 중국은 문화혁명 기간에 검찰이 폐지되고 공안이 권한을 대신 행사한 적이 있다.

1950년대 대약진운동 등을 거치면서, 문명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검사가 법률에 따라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특권 의식에 기초해 공산당의 지시나 결정에 항거하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특히 1966년부터 약 10년간 진행된 문화혁명 동안에는 검찰이 '인민의 적'으로 간주 돼 각종 인민검찰원이 차례로 폐지됐다.

그리고 1975년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수정해 급기야 검찰기관의 권한은 각급 공안기관에서 대신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권한을 모두 경찰인 공안에 넘겨주고 검찰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그 후유증은 심각했다. 대중노선에 의한 인민재판으로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현대적 사법 제도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실감한 중국은 1978년 헌법을 다시 수정해 인민검찰원 재건 등 검찰 제도의 복원을 시도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국은 서구의 검찰 제도와 많은 차이가 있다.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에게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반면, 중국은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지고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심사로서 그 수사권은 직권이용, 인권 침해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돼 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안은 이런 중국 모델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다.

중국도 강력 범죄가 많은 국가가운데 하나다. 중국의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중국 모델을 답습하고 있으니 격격이 대단하다. 이런 부가 보더라도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의 과도한 분리는 범죄 대응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중수청이 중대 범죄 수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부패·경제범죄와 같은 사건은 고도의 법률 전문성과 축적된 수사 경험이 필요한 영역으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구조가 되면 그걸 담보할 수 없는 까닭이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올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개혁의 원칙처럼 말하면서도 공수처와 특검은 여전히 두 기능을 함께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 정치적인 책략에 따른 검찰 패자리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다.

최근 '사법 과포 3법'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쟁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지도 안되고 마르기 전에 대통령이 재거되는 일이 반복돼왔다.

따라서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검찰 없는 국가를 만드는 법안에 이же명 대통령은 주저 없이 재거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 역시 피고인으로서 유유상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든 이번 입법비대면 그런 식으로 재거한다면 그 후폭풍은 이же명 정권을 삼켜버릴지도 모른다. 결코 아니다. 검찰 없는 국가를 만들고, 그로 인해 각종 범죄가 범죄 증가로 나타나는 사태는 막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버려진 담배꽂초 하나

기고



문병운
전남 정총서방서장

길을 걷다 버려진 담배꽂초 하나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이미 꺼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다. 그러나 불철 조건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만나면 그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다. 화재 원인을 분석해 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모든 거래를 오는 4월11일 오전 12시11분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은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을 넘어 공동체의 생존을 도모해야 할 비상시국임을 각별 유념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 경제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정부·경치권·기업·가계 모두 위기 극복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약물운전

기고



이주영
전남 해양경찰서 교통과

최근 교통사고의 새로운 위험요인인 '약물운전'이 떠오르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크게 높아졌지만, 약물운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약물운전은 단순히 불법 약물 뿐만 아니라 졸음 등 유해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약물은 집중력과 판단력을 저하시켜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규제와 더불어 예방에 있어 중요한 것은 스스로 위험에 대한 인식이다. 운전 전 복용한 약이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다면 운전을 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가족과 주변에서도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고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시민일보 siminilbo 지방자치를 이끄는 시민의 힘

독자전화 0213676-2114 구독신청 022926-0217

편집국 대표 0213676-2114 FAX 021762-8223

정치·행정부 021785-8115 경제·문화부 021926-0392

사회·수도권부 021926-0314 편집부 021926-0242

총무국 022926-0217 영업국 021926-0164 FAX 021762-8223

광고문의 021926-0164 윤리전화 032675-7956

www.siminilbo.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09(이도동, 국동VIP빌딩 6층) 구독료: 연간 180,000원 | 월정 15,000원 | 1부 800원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대문구 대표 휴양시설! 청풍명월의 자연이 어우러진 청풍유스호스텔에서 힐링 어떠세요?

- 소 재 지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3139
- 예약방법
 - ① 개 인 : 인터넷(www.chpungyh.co.kr.) 예약
 - ② 단 체(30명 이상) : 전화☎ 043 - 652 - 9090 예약
- 객실안내 : 4인실(거실겸방+욕실) / 6인실(거실+방2+욕실)
- 부대시설
 - ┌ 강당, 세미나실, 운동장 [이용료 별도 문의]
 - └ 바비큐장, 노래연습실, PC방, 농구장 등 [무료]
- 주변 관광지 * 사진출처 : 제천시청



(청풍호반 케이블카)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 (청풍호 유람선) (속눈썹 출렁다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 누리집 바로가기(QR코드) →

